

# “전북 친환경 전기차 산업, 세계로 도약”

송하진 도지사,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관련

산·학·연 참여  
공공기술 사업화  
플랫폼 환경 구축

기업 성장·일자리 창출  
전북경제 대도약 발판 조성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7일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대해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산업이 도내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에 탄탄한 토대를 다지고 세계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송 지사는 강소특구를 기반으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 플랫폼 환경이 구축됨으로써 도내 기업들이 특화기술을 바탕으로 도약해 나가는데 더욱 탄력을 받게 될



다며 “앞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전북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기동 중대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산업과 고용 위기가 닥쳐온 지난

상황에 대해 송 지사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다변화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지난 2년간 군산지역의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전기차 산업 육성정책 등 전북 대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 인프라 확대와 기술사업화 모델이 핵심적인 요소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현재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군산-새만금 산단에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사업 및 자율주행 상용차 군집도로 구축 등 국가 정책과 연계한 전기차 전장부품 및 부품소재 산업육성을 통해 군산지역을 미래차 전진기지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이스타항공 사태, 정부 적극 해결을”

도의회, 김정수 도의원 발의 건의안 채택

최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돼 1,600여명의 이스타항공 노동자가 당장 생계위기에 내몰릴 수 있어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지역경제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이날 건의안을 발의한 김정수(익산·교육위)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M&A로 발생한 대량실직 사태의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

라면서 건의안을 설명했다. 즉, 정부는 그동안의 외면과 과오를 인정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1,600여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파탄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긴급히 내놓아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정부는 노동자들을 농락하며 치밀한 행태를 벌인 이스타항공 사태를 파국으로 내몰 때까지 방치한 책임을 지고, 이들의 생존권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이명연 도의원, 코로나19 의료진 인건비 지급 등 건의안 발의

공공병원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 진안군의료원은 2020년 2월 21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관들은 보건복지부의 일원환자 전원조치에 따라 총 176억2700만원의 지출이 발생했으나 정부지원

은 9500만원의 적자가 발생, 일부 의료원은 인건비조차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27일 발의한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인건비 지급 및 전담병원 손실보전 촉구 건의안’을 통해 드러났다.

이명연 의원은 “코로나19에 헌신봉사한 의료진들에게 인건비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면 코로나19 2차 대유행 등이 발생할 때 어느 누가 자신과 가족을 희생시켜가며 헌신·봉사하겠는가”라며, “전담병원 의료진 인건비와 손실을 신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 도의회 5분 발언

### “도내 교육시설, 고르게 분포돼야”

최영일 도의원

도내 교육인프라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향점을 두고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교육위) 의원은 27일 제37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내 교육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교육이 되살아나야 한다”면서 “하지만, 도교육청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최영일 의원은 “현 정부가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도내 고른 교육발전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교육발전에 소외된 지역민들



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도교육청의 직속기관 소재지를 보면 단박에 드러나고 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도교육청이 전주를 비롯해 군산, 익산 등의 인구밀집 지역에 직속기관의 몫을 나누다 보니 군단위의 소외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멸위기 지역을 의미하는 도교육청의 행정 이 이들 지역의 소멸을 더 부추기고, 이들 지역의 존재가 심각한 위

협을 받고 있다는 것. 특히, 도교육청 소속 12개 직속기관을 살펴보면, 그나마 인구가 많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역할·기능에 상관없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울러, 같은 직속기관의 분과마저도 지역 특색과 역할 등이 구별되지도 않은 채, 4곳이나 배치됐다는 사실에 행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최영일 의원은 “인근 충남도교육청·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을 살펴보면, 지역별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해 직속기관을 분산배치했다”면서 “특히, 소외된 지역을 최대한 배려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전북도교육청의 안전한 교육정책을 질책했다.

### “여의도 면적 70배 농경지 침수 피해 발생”

나인권 도의원

전북도의회 농산임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2·더불어민주당)은 27일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농업·농촌·농민이 행복한 스마트농업을 이루려면 노후화된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북도에서는 호우 및 태풍으로 여의도 면적(290ha)의 70배에 이르는 2만 330ha의 농경지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2018년 침수 피해 농경지 4,350ha보다 4배가 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가 피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용 수리시설 관



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나 의원은 “도내에는 총 2,201개소 농업용 저수지가 있는데, 이들 저수지 중 90%가 70년대 이전에 건설돼 50년 이상 경과했고,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가 시급한 C, D등급을 받은 곳이 무려 55.6%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저수지 물을 농경지가 지 공급하는 데 필요한 용배수로 2만 2,501km 중 50.5%에 해당하는 1만 1,384km가 흠수로”라며, “약간의 집중호우에도 물이 수로 뚫을 넘어 농경지로 침수되거나 수로가 유실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재차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에 전북도는 그동안 배수개선사업,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아 수리시설 개보수 작업을 절감할까 진행하거나 공사 지연·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인권 의원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수리시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리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용배수로 허물러 버려진 그만이다”며, “전북도가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아동학대 예방·보호 대책 마련을”

김철수 도의원

우리사회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시의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전라북도가 긴급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임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은 27일 5분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전국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2만4,604건으로 2009년 5,685



건에 비해 약 4배가 증가하였으며 전라북도 아동인구 1,000명당 피해 아동 발생률이 5.44로 전국 평균 2.98 대비 약 1.9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잔혹한 아동 학대 사건들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에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10월 1일부터 관련 법률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개정의 통과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 만큼 우리도가 위기의 아동을 위한 긴급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상담센터, 가정위탁보호시설을 확대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질적 성장을 해나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호상 기자



첫 출근길에 미소 짓는 신임 통일부 장관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온라인 타인 사칭, 명백한 범죄”

민중 한병도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대 1000만원 벌금형 등 처벌조항 신설 사칭 피해예방 도모

전화, SNS 상 타인 사칭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타인사칭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 이를 위반해 타인을 사칭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 그 자체로 처벌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2차 피해 발생 시에만 민·형사상의 대응을 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용 등의 침해를 막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불법 정보 유통금지 조항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했다. 특히 타인의 동의 없이 유포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로써 사칭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엄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얼마 전 타인이 본인을 사칭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칭 피해자가 된 적이 있는데 관련 처벌 조항이 미비,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느꼈다”며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사칭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불 때 전화나 SNS상의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 타인 사칭 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이용호 의원

‘최속현 5법’ 대표 발의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이 국민체육진흥법,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이어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등 최속현 5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직장갑질 119’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시행 1년이 지나지만 여전히 직장인의 40% 가량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지방 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를 침해할 경우 규정, 상하 위계가 강한 공직사회 특성상 암묵적인 괴롭힘이 지속되는 구조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현실과, 복종의 의무만 있고 존중의 의무는 없는 공직사회의 현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묵적·일상적 폭력을 당연시하도록 만들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